‘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놓고 여야 거친 공방전

민주 전방위 공세…‘대행 부총리 체제’도 불사
박찬대 “내란 잔당들 시간 끌기 묵과 않을 것”
국힘, 韓대행 탄핵시 ‘가결정족수 200석론’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와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검토가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을 부각하며 한 권한대행의 빠른 특검법 공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를 재차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자신이 ‘내란 대행’ 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무위원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한 권한대행 다음 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핵을 당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처럼 민주당이 과감한 공세를 펴는 것은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한 여론의 흐름이 여전히 야권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이 전날 열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남태령 집회’ 현장을 찾는 등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8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시민사회 주도 장외집회에도 적극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데 대해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안 표결 시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 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3분의2 이상의 탄핵소추 요건이 요구된다”며 “민주당이 마음대로 헌법을 해석해 강행하더라도 직무 정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 가결 시)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해석에 부합한다”며 “민주당이 이의가 있다면 재판으로 다투는 것까지 말리지 않겠지만 이는 헌법 취지상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노상원 수첩 ‘NLL 北공격 유도’ 표현 확인”

경찰, 尹대통령 외환죄 혐의 등도 조사…판사 등 ‘수거대상’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이 닿는 부분이다. 다만, 경찰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윤대통령을 내란 외에 ‘외환죄’로도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대통령을 외환 혐의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노 전 장관의 수첩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됐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고 판사 등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수거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수첩에 담겼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손바닥 크기의 60-70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고령’ 관련 내용은 수첩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해 분석하던 중 그와 계엄 전후 여러 차례 연락한 노 전 사령관을 사건 중심인물로 특정했다고 했다. 또 노 전 장관이 현재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와 계엄 전 ‘햄버거 회동’을 한 정보사 관계자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부, ‘24일 특검법 공포’ 野요구 불응

국무회의 상정 않기로…31일 거부권 행사 관측도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도 “주어진 시한(내년 1월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을 방침이어서 24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 중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고,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거절…성탄절 조사 무산 우려

전자공문 열람 않고 우편물도 ‘수취 거절·수취인 불명’ 모두 미수령
공조본, 소환 통보 25일까지 기다린다는 입장…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서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일단 25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조본은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별도의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 측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에 해당한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한 차례 불응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은 공수처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형사 사건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무도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내란 공모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기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의 형평성, 신속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무대응’ 전략을 펴는 윤 대통령 측 회신을 공수처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는 물론 헌법재판서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尹대통령 개인 통화 내역 확보

최상목 ‘하달 문건’도…비상계엄 국무회의 ‘하자’ 결론

‘12·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계엄 관련자들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사용한 비화폰(보안휴대전화)의 실물과 통화 내역 역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확보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13일 국회에 출석해 “(문건에)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6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했다. 이로써 경찰은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조사 등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경찰, 국힘 추경호 의원 26일 피의자 출석 요구

12·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2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추 의원에게 지난 18일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계엄령 발령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하며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추 의원을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